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6.10(수) 14:00부터 보도 가능</h2>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제재심의국		
책 임 자	김연준 팀장 (2156-9680) 최성일 국장 (3145-8300) 이병삼 국장 (3145-7800)	담 당 자	류성재 사무관 (2156-9683) 이우석 부국장 (3145-8288) 송평순 팀 장 (3145-7821)
배 포 일	6. 10(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 목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1. 추진 경과

-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상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재심 개최에서 종료까지 대상자가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
- 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 진웅섭)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同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 : 6.10~7.20(40일간)

II.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를 명시

* 금감원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를 통해 신설

-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현장에서 同 기준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하도록 의무화
- 검사원은 同 기준을 유념하여 검사권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검사원 복무수칙」에도 명시

□ 아울러,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上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 공정·투명한 검사진행을 위해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

* 중점 검사사항 등 안내, 사전예고 통지, 면담 및 자료요구, 권리구제절차 안내 등

2.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 제재대상자가 ①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②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을 열람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공정한 발언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개선

① **(기본원칙)** 금감원장은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규정)

② **(제재심 부의사실 통지)**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재심 부의예정사실을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보 (세칙)

③ **(사전통지)** 사전통지시 위규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규정)

- 제재심 부의안(‘제재대상 사실 기재’ 부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사전통지서를 작성 (금감원 사전통지 서식 개정)

④ **(제재심 안건 열람)** 안건 및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권 보장 (규정)

- 제재심 개최 전 안건 중 본인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반론권의 효과적 행사 지원
- 단, 금융시장 안정, 수사의 밀행성 보장,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 등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제3자의 권익침해, 관련 법령 상 비공개 대상인 경우 등 (세칙)

⑤ **(제재심 개최시 공정한 발언기회 보장)** 제재심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간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을 개선

- 금융위·증권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동시에 제재대상자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III. 기대 효과

- 검사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 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한 자기규제(self-regulation)를 강화
-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IV. 향후 추진계획

- 6.10~7.20일(40일),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 변경예고 실시
- 8월말,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의결

* 세칙은 금감원장 결재사항

○ 개정 규정의 관보 게재 및 시행

- 9월~,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방안 시행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

<붙임>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이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와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원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하여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등에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와 관련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은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